

한국의 독도, 평화와 상생의 기회: 공공외교 및 협상 관점의 연구 (탁월한 소시민 협상가, 어부 안용복을 기리며)

황미애*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관계학과 석박통합과정)

〈 초 록 〉

목적: 한국과 일본은 오랜 역사를 거치며 상호 긍정적, 부정적인 긴밀한 영향력을 끼치며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먼 사이로 복잡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한국의 동해상의 섬인 독도는 일본이 제국주의적 행보의 연장으로서 자국의 이해를 위해 영토 분쟁화하려는 지속적이고 무모한 도발을 함으로써 양국 간에 불필요한 오해와 난해한 갈등을 초래하는 문제로 상대국을 향한 강한 비판과 긴장 속에서 서로를 향한 적대감과 불신을 키워 가는 논쟁이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왜 독도는 한일 양국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문제가 되었고, 어떻게 하면 이를 해결하고 보다 발전적인 관계로 나아가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한다.

방법: 독도 문제에 대한 현 상황을 역사 및 정치적, 국제법적, 그리고 공공외교적 관점으로 다각화된 분석의 틀을 제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협상 이론 및 전략을 적용하여 세 가지 해결 방안, 즉 대응적 강경전략, 법적 행정전략, 그리고 공공외교적 포용·상생전략의 모델을 제시한다.

결과: 양국이 우선 보다 협력적인 대화와 활발한 소통의 교류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후 만약 양국의 갈등이 첨예화된 상황에서 분명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에 이르면, 한국이 일본과의 협상에서 명백히 한국의 영토인 독도를 수호하며 대상국과도 가능한 한 상호협력적이며 상생적인 관계로 발전하는 공공외교적 관점의 협의를 도출해 내고 실현할 수 있다.

결론: 한국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침해를 종식하고 동시에 이제는 독도가 갈등과 혼란의 대상이 아닌, 양국이 소통하고 평화적으로 화합하는 기회와 발전의 대상이 되어 양국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국제사회에서도 화해와 화합의 모범적인 사례를 선도하여 세계 평화와 발전에도 이바지하고자 한다.

핵심어: 독도, 공공외교, 협상, 평화, 상생

* 제1저자, hmiae228@gmail.com

1. 서 론

지리적으로 근접한 두 국가인 한국과 일본은 오랜 역사를 거치며 상호 긍정, 부정적으로 긴밀한 영향력을 끼치며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먼 사이로 복잡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19세기 중반, 서구 세계에 빠른 개방정책으로 문명화와 국제화를 이룬 일본은 그러한 발전을 발판으로 20세기에 세계 패권을 향한 열망을 가지고 식민정책의 주도국이 되었으며 전쟁으로 인한 전 세계적 고통을 초래했다. 일본은 식민정책으로 한국의 주권을 점령하고 나라 전체를 수탈하여 세계를 점령하려는 야욕의 도구로 활용했다. 이에 한국은 민간의 자발적인 독립운동을 주축으로 각고의 노력 끝에 1945년 8월 15일 마침내 독립을 이루었다. 하지만 1950년 강대국들의 동북아 패권을 둘러싼 정치적 이념과 갈등으로 인해 한국 전쟁을 겪고 다시 남북한으로 나뉜 분단국가가 되었다. 이후 남한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 다시 나라를 일으켜 세우고자 경제발전과 민주국가로 성장하기 위한 전력의 노력을 기울였다. 일본 또한 2차 세계 대전 패전국으로 폐허가 된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고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되찾기 위해 전력하였고, 그 결과 두 나라 모두 아시아를 대표하여 성장과 발전을 상징하는 국가로 자리하게 되었다. 두 국가는 지리적으로 세계의 패권적 대국들 사이에서 힘의 견제와 이해 충돌에 따른 고충을 겪으며 이를 잘 활용하고 대처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을 함께 공유하는 동시에, 두 나라 사이에 오랜 기간 축적된 상처와 오해, 불신의 부정적 관계를 해소하지 못하고, 경쟁과 협력 사이에서 힘겨루기와 줄타기를 하는 난해한 관계에 놓여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독도 분쟁은 국가 간 해결하기 어려운 영토 분쟁의 이슈로 논쟁을 이어오고 있어, 상대국을 향한 강한 비판과 긴장 속에서 끊임없는 갈등의 요소가 되고 있다. 독도는 두 국가 영해 사이에 위치하며 작지만, 영토, 환경 및 해양자원적 가치가 매우 높은 섬으로, 첨예한 이해관계와 맞물려 두 나라 사이의 긴장과 갈등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대상이 되고 있다. 이는 오랜 기간 이미 논리적인 사고와 대처에 앞서 즉각적으로 부정적이고 방어적인 태도로 각인되어 가는 문제로,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의 전환 없이 점점 치킨 게임(chicken game)의 성격으로 양극단을 향해 질주해 가는 상황이다. 일본은 한국이 이미 영유권을 행사하고 있는 독도를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며 국내 국외적으로 전략적 홍보 활동과 교육을 통한 사회화를 진행하고 있고, 한국은 이러한 도발 전략에 공식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이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이슈화하려는 일본의 전략에 휘말리지 않는 최선의 입장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일본 역시 자국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전략적 행보를 취하지만 영토 분쟁의 민감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정치적 위험 요소 등 극단적인 갈등을 심화시키지 않으려는 의도를 보이고는 있다. 하지만, 독도를 둘러싼 양국의 현 상황 속에서 이미 어느 정도 독도는 분쟁 지역화가 진행되었고 양국의 후세대들이 정반대의 잘못된 정보를 사실로 받아들이는 사회화가 계속된다면 다음 세대에 더 큰 혼란과 갈등이 초래될 것이므로, 이에 대처하기 위해 좀 더 적극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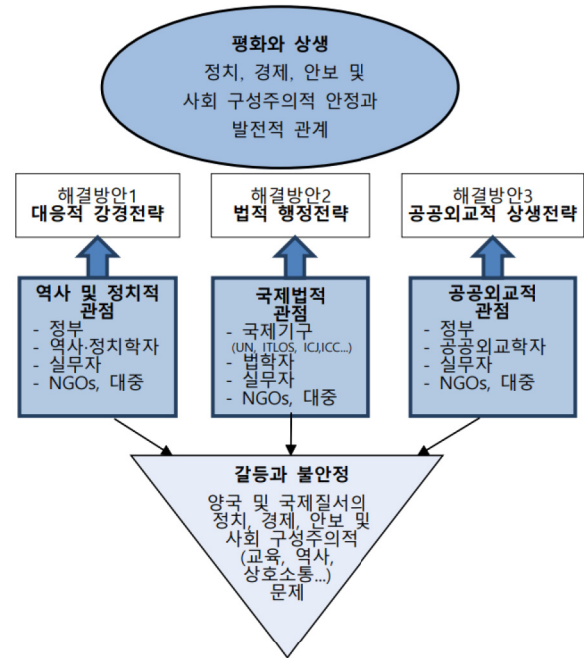
본 연구는 ‘왜 독도는 한일 양국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문제가 되었고, 어떻게 하면 이를 해결하고 보다 발전적인 관계로 나아가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가?’라는 논제를 가지고, 먼저 이전의 방대한 연구 자료들과 그동안의 논쟁들을 분석하고 정리하여 두 나라의 주장 뒤에 있는 논리에 대해 세 가지 관점, 즉 역사적 자료 및 정치적인 이해관계, 국제법적 규정과 논리, 그리고 공공외교적 관점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양국의 갈등이 첨예화된 상황에서 분명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에 이른다면, 폭넓고 다각적인 이해와 접근 방식으로 협상 이론 및 전략을 독도 문제에 적용하여 한국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침해를 종결하고 대상국과도 가능한 한 상호협력적이며 상생적인 협의를 도출해 낼 수 있는 해답을 찾고자 한다. 이를 통해, 독도가 이제는 갈등과 혼란의 대상이 아닌 양국이 소통하고 평화적으로 화합하는 기회와 발전의 대상으로서, 공공외교적으로도 양국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국제사회에서도 화해와 화합의 모범적인 사례를 선도하여 세계 평화 발전에도 이바지하기를 도모한다.

2. 상황 분석

1) 분석의 틀

독도에 관한 연구는 다양한 관점과 방대한 분량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러한 연구에 대해 좀 더 통합적이고 종합적으로 정리된 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고, 또한 최근 국제관계 연구의 주요한 관점 중의 하나인 공공외교적 접근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본 연구는 독도 문제에 대해 지금까지의 연구와 추가된 관점을 총망라하여 먼저 세 가지 관점 즉, 역사 및 정치적, 국제법적, 그리고 공공외교적 관점으로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갈등과 불안정한 상황을 분석하고자 한다.

독도 논쟁에는 한국과 일본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복잡한 입장이 얹혀 있으며 이에 대해 독도 영유권에 대해 상반된 증거로 제시되는 역사적인 자료들과 양국의 정치적인 이해관계와 맥락 속의 관계 및 국제법적 규범들에 대한 논쟁, 그리고 공공외교적 관점에서 지금까지의 상황을 분석 제시하며, 또한 시간상으로 이루어진 지금까지의 주요 사건들을 정리하여 객관적인 흐름을 제시한다. 또한,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향후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다양한 협상 이론들 즉, 엔트리 게임(Entry Game), 양면 게임(Two-level game), 협상 가능 영역(Zopa, Zone of Possible Agreement), 바트나(BATNA)와 같은 협상의 원칙과 전략들을 적용하여 세 가지 해결 방안 즉, 첫 번째 역사 및 정치적 관점에 따른 대응적 강경전략, 두 번째 국제법적 관점에 따른 법적 행정전략, 그리고 세 번째 공공외교적 관점에 따른 공공외교적 포용·상생전략을 제시하여 양국 및 국제적인 평화와 상생을 추구하는 해결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림 1] 독도 문제에 대한 세 가지 관점의 분석 및 해결 방안 모델

2) 독도 문제에 관한 세 가지 관점의 현 상황 분석

독도 문제에 대한 다양한 논점들과 주장들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와 분석을 위해 본 연구는 세 가지 관점을 종합하여 분석 제시하고자 한다. 즉, 첫 번째 역사적 관점에 따라서 오랜 시대를 거치며 축적 해온 다양한 자료들을 가진 한국과 일본의 상반된 주장에 대해 분석하고 또한 정치적 관점에 따른 양국의 입장과 변화 양상을 논하고 두 번째, 국제법적 관점에 따라 적용되는 법적인 원칙과 다양한 사례들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아직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공공외교적 관점의 분석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역사 및 정치적 관점

한국은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인지하고 관리해왔으며 이 사실은 국민적 인식과 역사적 자료를 통해 양국에서 오랜 기간 인정되어왔다. 하지만, 일본은 독도가 오랜 기간 무인도였고 한국의 자료들이 독도를 지칭하는 여러 지명으로 표기된 데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자국의 자료들을 영유권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① 한국의 역사적 자료와 주장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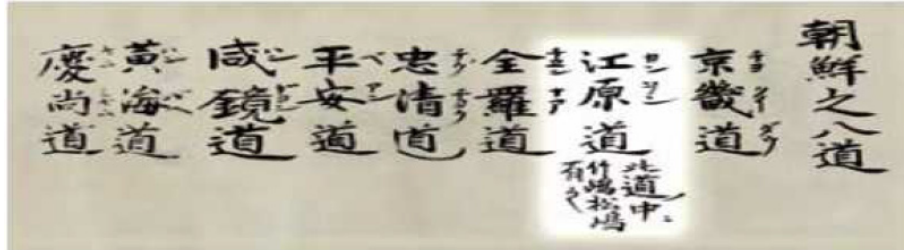
한국은 일본이 독도를 인지하기 훨씬 이전부터 이미 독도에 대한 자국의 영토권을 가지고 관리를 해왔고 이에 대한 수많은 역사적 자료들을 가지고 있다. “한국은 신라 시대 512년부터 1882년까지 독도에 대한 지속적이고 평화적인 영토권을 가지고 있었고, 1882년부터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관리를 다시 본격 재개하여 1883년 김옥균을 관리자로 임명하였다. 1900년에, 한국의 황제가 독도를 울릉군에 속하는 지역으로 칙령 41조를 선언했고 ‘삼국사기(세 왕국에 대한 역사서 1145)’를 비롯한 ‘세종실록, 지리지(세종대왕의 지리서, 1454),’ ‘동국여지승람(한국지리연구서, 1531),’ ‘동국문헌비고(1770),’ ‘만기요람(1808),’ ‘증보문헌비고(1908)’ 등과 같은 수많은 역사 자료들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한 자료들은 두 개의 섬, 즉 우산 섬(울릉도)과 우산(독도)의 존재에 대해 오랫동안 인지해왔음을 증명한다(곽진오, 2020).

<그림 2>의 첫 번째 사진과 같이 지리적으로, 날씨가 화창한 날 독도는 울릉도에서 시야로 관측할 수 있고 이러한 가까운 위치로 독도는 역사적으로 울릉도의 일부로 인식되어왔다. 세종대왕의 세종실록 지리지(1454)에는 “우산(독도)과 무릉(울릉도)은 나라의 동쪽 바다 한가운데에 있다. 두 섬은 서로 멀지 않기에 날씨가 좋은 날, 각 섬에서 서로 관측이 가능하다. 그 섬은 신라 시대에 우산국으로 불렸고 그것은 또한 울릉도라고 알려져 왔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한국의 지도 자료 (동국문헌비고의 여지도)의 기록은 울릉(울릉도)과 우산(독도)은 우산국의 영토라고 언급하며 우산(독도)은 일본이 마쓰시마라고 불리는 것으로 우산도는 독도를 명확히 지칭한다. <그림 2>의 두 번째와 세 번째의 한국의 8도 지도(팔도총도)는 한국의 지리서(동국여지승람)로서 동쪽 바다에 울릉도와 우산도(독도) 두 개의 섬들을 가지고 있고 위치가 정확하지 않지만, 두 섬의 존재는 지도가 그려졌을 때 명확히 인지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18세기 이후에 제작된 지도들은 동국지도를 포함하여 우산도를 울릉도의 오른쪽에 위치시키며 독도의 위치와 모양이 더욱 정확하다”(곽진오, 2020).



[그림 2] 독도에 관한 사진과 지도들¹⁾

1) “동국여지승람 (1530)이 증보되어 1년 뒤에 신증동국여지승람 (1531)이 관찬 지리지로 편찬되었고 이 문헌에는 강원도 울진현 조에 우산도(독도)에 대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으며 부록에는 팔도총도(八道總圖)가 그려져 있으며 이 지도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로 그려져 있다(곽진오, 2020).”



[그림 3] 안용복에 관한 일본의 자료²⁾

“더욱이, 주목할만한 협상 기록의 예로, 17세기 조선 숙종 대왕 시절, 한국과 일본 사이를 오가며 울릉도와 독도에서 어부로 활동하던 안용복이 어부의 신분으로 일본을 방문하여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주장하는 기록이 한국과 일본 양국의 자료에 남아있다. 자료에 따르면, 그는 처음에는 일본 관리들에 의해 체포되어 일본을 방문하게 되었고 두 번째는 현재의 민간단체인 비정부기구(NGOs,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s)의 성격을 띠는 단체를 구성하여 전략적인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서류를 준비하여 일본으로부터 독도 영토권을 인정받으려 방문하였다. 그의 이러한 노력은 울릉도에 대해 조선과 일본 양국 간 국가 단위의 논의를 촉진했고 궁극적으로 일본이 울릉도와 독도는 한국의 영토임을 인정하도록 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그림 3>의 일본의 자료에 따르면, 안용복은 다케시마(울릉도)와 마쓰시마(독도)가 조선의 강원도 사범권 아래에 있음을 주장했고 1693년 도쿠가와 현으로부터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인정하는 서류를 받았고, 이것이 숙종 대왕의 기록에 나타난다(곽진오, 2020).”

② 일본의 역사적 자료와 주장들

“일본은 독도에 대한 일본 고유 영토 설을 주장하지만, 이는 일본이 오랫동안 독도를 한국의 영토



[그림 4] 일본의 지도³⁾

2) 원록구병자년조선주착안일권지각서 內藤正中·朴炳涉(2007), 竹島=獨島論争: 歴史資料から考える, 新幹社. p.66. (곽진오, 2020)

3) 출처: <http://www.mofa.go.jp>

로 인정해 온 근거들로 인해 타당성이 미흡하다(송휘영, 2018). 일본은 ‘일본의 토지와 도로들의 개정판’을 제시하며 일본이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간주해왔다고 주장하지만 <그림 4>의 일본의 지도와 같이 1779년에 완성된 원본과 1846년 개정 본에 독도와 울릉도는 위도와 경도 밖에 있다(곽진오, 2020).”

③ 정치적 관점

영토 분쟁에 대한 세계의 많은 사례가 있고 이러한 문제들은 양국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대립 되어 극한 긴장 속에서 수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키기에 제로섬 게임(zero-sum game)의 형태로 갈등을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독도에 대한 논쟁은 또한 국내외적인 힘겨루기로 장기적이고 다각적인 측면의 정치적인 문제로 이어져 왔다. 일본은 독도, 센카쿠 열도(Senkaku Islands) 그리고 쿠릴 섬(Kuril Islands)에 대해 장기적인 전략과 다양한 접근 방식의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왔으며, 독도는 경제적, 정치적 그리고 안보적인 이점을 확대하고자 하는 국가적인 목표를 가지고 접근해오고 있다. 강대국들 사이에서 식민주의를 겪은 아시아 국가들은 영토문제에 대해 특히나 예민하다(우준희, 2019). 독도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3국의 동맹을 해치지 않고자 중립적이지만, 한국은 3국 동맹의 상호협력적인 관계를 해치지 않기 위해 소모적인 독도 논쟁을 종결시키도록 미국의 협력을 더욱 강조해야 한다(김명기, 배균성, 2017).

한국과 일본 양국은 독도 문제를 대중의 압력과 비평에 부응하기 위한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목적을 위해 다른 전략을 가지고 다루어 왔고, 점점 더 많은 논쟁과 갈등들이 국내 여론에 의해 더 강화되고 그것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효과를 가지고 돌이키기 힘든 방향으로 더 많은 긴장을 일으키고 있다. 1965년 한국과 일본이 외교 관계를 재건한 이후로, 어업 협정을 맺은 독도 문제는 모호한 상태로 적절한 협의 없이 양국의 완고한 반대 견해의 논쟁만을 키워왔고 각 나라는 일관되지 않게 대응해왔다. 독도 문제에 대한 유럽의 견해는 대부분 과거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와 같은 맥락으로 비평적인 입장이다. 따라서 한국에 대해 호의적인 논문들이 더 많고, 한국 정부는 독도 문제에 대해 그 배경에 있는 일본의 제국주의적 논리에 관해 국제적인 담화를 알리고자 하는 보다 전략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 유럽의 연구와 논문들을 살펴보면, 프랑스, 영국, 독일과 러시아 등 대부분은 독도와 다케시마를 둘 다 사용하고 있는데, 1900년대에는 다케시마를 먼저 쓰고 2000년대에는 독도를 먼저 쓰고 있다. 또한, 양국 사이의 해양에 대해, 이전에는 일본해를 더 많이 기재하였으나 현재는 동해와 일본해 두 가지를 모두 사용하는 것으로 변화되었고 러시아는 이 문제가 쿠릴 섬과도 매우 유사한 문제이기에 다른 나라들보다 더욱 큰 관심이 있다(윤유숙, 2011).

(2) 국제법적 관점

한국은 역사적으로 오랜 기간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가진 데 대한 확고한 국민적 인식과 수많은 자

료에 대한 자신감으로 인해 국제법적 인정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했다.⁴⁾ 반면에 일본은 국제법적 틀 안에서 적극적으로 접근하면서 문제를 제기해 왔다. 두 나라 간의 식민시대, 전쟁, 독립, 냉전과 현대의 급격한 경제발전 등의 복잡한 관계가 발전되어 온 만큼, 국제법적인 이해와 계약 관계들에 대한 해석과 평가 또한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이다. 약 110년 전쯤, 일본은 1904년 러일전쟁 때문에 독도에 관해 관심을 두게 되었다. 당시, 일본은 울릉도에 감시탑을 세웠고 동해에 있는 러시아 함대를 정찰했다. 이런 과정에서 일본은 독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1905년 2월 22일에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합병하는 시마네현 칙령을 선포했다. 이 칙령에서 일본은 독도의 이전 지명인 송도(마쓰시마)를 현재의 일본 이름인 죽도(다케시마)로 변경했다. 전쟁 이후, 일본은 독도에 대해 ‘무주지 점령’을 주장하며 이 칙령을 독도에 대한 한국 영유권을 부정하는 강력한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일본이 독도를 한국의 섬으로 인정했다고 하더라도, 일본은 이것에 대해 한국에 대해 알리지 않았고 도쿄 외무성에도 보고하지 않았다. 이와는 반대로, 1876년 일본이 보낸 섬을 합병할 때는 이를 도쿄의 미국, 프랑스, 독일 외무성에 보고했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 독도에 대해 무주지와 고유 영토 설에 근거한다는 일본의 입장은 합리적이지 않다(곽진오, 2020). 다음은 독도에 관한 국제법과 관련한 사항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① 1900년 한국 황제 41번 칙령과 1905년 일본 시마네현(Shimane) 고시

국제법상 원칙으로 볼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1900년 한국 황제 41번 칙령과 1905년 일본 시마네현 합병이다. 1900년 한국 황제 칙령 41번은 ‘석도’가 한국의 영토라고 선언한 것이다. 이는 일본의 1905년 시마네현 고시 이전에 한국이 소유권을 가진 서류였음을 증명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석도’라는 명칭이 현재의 독도를 지칭하는 것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는 논리가 있다. 독도는 바위로 이루어져 있고 돌섬(한국말로 ‘돌’은 바위를 뜻하고 ‘섬’은 섬을 뜻함)으로 불린다. 돌은 또한 한국 고대어로 ‘독’으로 지칭되었고 중국어로는 ‘석’이다. 따라서, ‘돌섬, 독섬, 석도’ 등의 몇몇 이름이 있었고, 1904년 이후로 사용되는 ‘독도’는 일본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한국 이름을 중국식 이름, 한자어로 바꾸면서 생겨난 이름이다(강준식, 2012).

② 식민시대와 제2차 세계 대전 중의 조약들과 서류들

식민시대와 제2차 세계 대전 중의 조약들과 서류들은 매우 주의를 요구하며 복잡하고 다양한 관점으로 해석된다. 일본은 먼저 독도가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며 1905년에 시마네현에 속한다고 선언했음을 주장한다. 다음으로, 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독도를 일본이 포기한 영토로 포함하지 않았고 마지막으로, 독도는 미국과 일본이 맺은 1950년 SCAPIN((Supreme Command for the Allied Power

4) <http://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002304100012&ctcd=C03> 독도 반환청구 소송 강정민 조선일보 기고/한일 독도 전문가 끝장 토론 주간조선 2014. 4. 28)

Instruction)⁵⁾ 2160조와 1952 조약에 기초하여 군사기지로 활용되었다. 한국은 먼저, 독도가 안용복의 협상과 일본 공식 서류에 입증된 바에 따라 역사적으로 한국의 고유 영토임을 주장한다(이창위, 2018). 다음으로, 1905년 일본이 독도를 무주지 섬으로 일본에 합병한 것은 독도가 공식적으로 한국에 속해 있는 것이기에 타당하지 않다. 마지막으로, 제2차 세계 대전 중의 카이로(Cairo) 선언에서부터 샌프란시스코(San Francisco) 조약에 이르기까지 독도는 한국의 영토임을 나타낸다(김채형, 2007). 딘 러스크(Dean Rusk)의 서한은 국제사법재판소(ICJ,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원칙 38-1에 따라 타당하지 않으며 이것에 기초한 일본의 주장은 인정될 수 없다(최경옥, 2017). 더욱이, 2007년 미국 국방성에서 발견된 서류에는 독도 문제가 좀 더 주의 깊게 재고되어야 한다고 적혀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김찬규, 2009).

한국은 또한, 독도 문제에 관해 회원국들 사이의 법적 효과가 있는 UN의 해석을 강조한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은 항복 후 “포츠담(Potsdam) 선언”을 수락했다. UN은 1946년 1월 26일에 SCAPIN No 677-3, 677을 선언했고 일본은 울릉도, 죽도(독도)와 제주도에서 퇴거하게 된다. 한국 전쟁 동안, UN은 한국 주권에 대해 방어지역으로 동해(독도)를 포함했고 이에 대한 일본의 반박은 없었다. 또한, 한국 통신 지역의 사령부 토마스 헤란(Thomas W. Herren) 장군에 의해 쓰인 리앙쿠르트 바위(Liancourt Rocks, 독도)를 폭격 지역으로 사용하는 것을 즉각 중지하라는 내용의 공식 서한이 있었다(김명기, 2015).

③ 국제법 기구

일본은 독도 문제에 대해 국제적인 수준으로 관심을 불러일으키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함으로써, 한국의 소극적인 법적 대응에 대해 의구심을 일으키고 이를 국제적인 논쟁으로 만들려는 장기적인 목표와 전략을 가지고 행동해오고 있다. 반면, 한국은 독도 문제가 영토 분쟁으로 인식되는 부정적인 관심을 피하고자 국내 여론에만 집중을 해왔고 근본적인 배경과 진실에 대한 국제적인 이해와 인정을 발전시키지 않았다(Kwak, J. O., 2018). 독도 문제와 관련된 국제기구들과 개념들에는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the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UN 해양법 협약(UNCLOS,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배타적 경제 수역(EEZ, The Exclusive Economic Zone), 국제사법재판소(ICJ,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국제형사재판소(ICC,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등이 있다.

<그림 5>와 같이, 지리학적 측면으로는 독도에서부터 한국의 섬인 울릉도까지 87km이고 독도에서 일본의 오키섬까지는 158km로 한국에 더 가깝다. 1982년 UN 해양법 협약에 따르면, 국가들은 해안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 기본 연안선으로 인정된다. 독도는 한국과 일본 사이의 바다가 중첩되는 곳에 있지만, 배타적 경제 수역은 바다에 대한 것일 뿐 영토문제는 별개 문제로 전혀 관련이 없다. UN은 두 국가가 중첩되는 지역에 대해서 합의하도록 권고하며 한국과 일본은 공동권한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두 나라가 독도의 영토권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독도 주변의 바다 또한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독도 문제는 배타적 경제 수역과는 별개의 문제로 간주되어야 하며 독도 주변의 풍부한 자

5) SCAPIN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080622020002300>

원에 대해 확실히 증명되지 않은 추측들로 인해, 이해 당사자들 간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핵심 요소들이 되고 있다. 2006년에 한국 정부는 UN 해양법 협약 산하의 강제 사법으로부터의 배제를 선언했고 일본은 이 문제를 국제해양법재판소에 가져갈 수 없다. 1980년 이래, 2002년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의 경우와 같은 더 많은 문제가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논의되었고, 20세기 이후로 29개의 섬에 관한 영토 분쟁 문제 중, 12개의 경우가 다루어 졌다. 한국은 국내외적인 두 접근 방식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활동하면서, 침착하면서 전략적으로 대응하고자 노력하며 보다 적극적으로 학술회의를 개최하고 모의 협상, 양국의 전문가들, 학자들 학생들과 활동가들 시민 단체들을 참여시키는 활동들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강정민, 2014).



[그림 5] 독도까지의 거리 및 영해⁶⁾

(3) 공공외교적 관점

공공외교(Public Diplomacy)는 과거 전통적인 국가 간 외교기관을 통한 공식적 외교 외에 민간단체와 일반 시민 등을 포괄하여 대상국의 국민을 대상으로 펼치는 국가의 전략적인 소통을 위한 모든 외교적 활동을 뜻하며(Cull, N. J., 2009) 과거에도 이러한 노력이 있었으나 1990년대 국가의 힘을 나타내는 하드 파워(Hard Power) 즉, 군사력 및 정치, 경제 등의 경쟁적 힘과 소프트 파워(Soft Power)인 문화와 역사 등의 매력적 힘의 개념을 정립하고(Nye, J.S., 1990) 현대의 IT 등 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대중의 영향력이 막강해지는 시대에 그 중요성과 역할이 매우 활발하게 연구되고 실행되고 있다. 이러한 공공외교적 관점은 독도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점을 찾는 데 있어 매우 적합하고 효과적이며 중요한 의미가 있다. 공공외교적 관점은 현재 상황과 해결방식의 두 가지 방향으로 논의될 수 있다. 첫째로, 독도 문제로 인해 야기되는 한국과 일본에 대한 국제적 인식의 문제와 둘째, 이를 해결하는 방식에 대한 접근법이다. 먼저, 일본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제국주의적 행보의 연장선으로 주변국의 영토를 도발하는 부정적인 국가 이미지를 가지게 되고 이러한 행보는 자국의 이익이 되는 것

6) 출처: 국토 해양 조사원

이 아니라 전범국의 과거를 청산하고 정상국가로 회복하는 데 크나큰 손실이 되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또한, 한국은 과거 강대국들의 영향력 속에서 피해를 본 약소국의 트라우마(Trauma)를 넘어서지 못하고 계속되는 도발의 대상이 되어 때마다 분노에 시달리는 국민 정서적 스트레스를 과감히 해결하지 못하는 소극적인 이미지를 가지게 된다. 결과적으로 이는 양국 모두 공공외교적 관점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문제로 인식된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외교적 해결 방안이 더 활발히 이루어져 양국이 이러한 갈등 양상을 지속하기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절실하다. 일본은 경제력 등의 굳건한 하드 파워를 가진 국가이고 한국은 빠른 성장을 통해 괄목할 만한 하드 파워의 성장을 이루었고 더불어 한류라는 흐름을 일으키며 문화적으로 전 세계의 관심을 받는 소프트 파워를 발휘하며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의 시너지를 키워나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독도 문제에 대해서도 한국이 가진 소프트 파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독도를 갈등이 아닌 화합과 소통의 대상으로 전환하여 한국의 영유권을 공고히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공공외교의 주체인 정부와 학자들, 비정부기구 실무진과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적극적이고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독도가 가진 의미와 다양한 가치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공유하여 상호 번영을 추구하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3) 시간적 서술의 분석

다음은 독도 문제에 대해 한국을 주축으로 하고 그 외 일본 및 여러 나라를 포함한 역사적인 활동들을 시간적 연대기 순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독도에 대한 역사적 사실들을 논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현재의 논쟁과 오해들을 풀기 위한 해결의 토대를 찾아보고자 한다. 독도는 독섬, 독섬, 우산도, 죽도, 무릉도, 요도, 삼봉도, 가지도, 다줄 섬(프랑스 지칭), 다케시마(일본 지칭) 등과 같이 다양한 이름들로 불렸고 한국은 일본보다 독도에 대한 훨씬 더 많은 역사적인 자료와 증거들을 가지고 있으나, 일본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일본은 러시아와 일본의 전쟁 동안에 독도에 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이후, 국제법에 준거하여 강대국들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국제사회의 시선을 끌고 대화하는 데 집중해왔다. 일본은 한국이 불법적으로 독도를 점거하고 있다는 사실과 다른 정보를 국정교과서에 수록하고 교육을 통한 사회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한국은 독도를 고유한 영토로 간주하고 이 사실 이외의 다른 논쟁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일본은 독도가 그들의 영토임을 국내 및 국제적으로 주장하는 노력을 계속해 오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이와 같은 내용의 교과서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혼란된 사회화에 대해 명확하고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특히 젊은 세대들은 이후의 심각한 갈등과 논쟁들이 스노우볼 이펙트(Snowball Effect, 눈덩이 효과)와 같은 사태로 발전되어 큰 혼란과 갈등을 겪을 수 있다. 다음은 이와 같은 상황 전개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를 위해 독도 문제에 대한 시간적 연대기를 제시한다(강준식, 2012).

<표 1> 독도 문제에 대한 연대기(강준식, 2012)

(*한국)

*521년	신라(한국의 고대국가/김이사부 장군)의 우산국 점령 (‘우산도-독도’와 함께)
*1157년	김유림이 ‘우릉도’를 시찰했음, 삼국사기에 기록됨
*1416년	김인우가 ‘무릉도’를 시찰했고 우산도로 지칭함
*1429년	세종대왕이 ‘요도’에 대한 보고를 받음
*1470년	삼봉도에 대한 보고서가 있음
1618년(일본)	무라가와 이치베의 울릉도 방문, 그림을 그리는 허가를 받음
1693년(일본)	무라가와와 요가 가족의 배가 울릉도에 도착
*1693년	안용복이 체포되고 일본에 보내짐
*1694년	장한상이 울릉도에서 시야로 독도를 관측함
*1696년	안용복의 일본 방문, 일본이 울릉도 접근에 대해 금지령 내림
1787년(프랑스)	울릉도를 발견하고 ‘다즐섬’이라고 명명함
1789년(영국)	울릉도를 Argonote 섬으로 오해함
*1794년	한창국이 가지 도를 방문한 내용이 강계고에 기록됨
1849년(프랑스)	독도를 리안쿠르 섬으로 명명함
1854년(러시아)	독도를 Menelai Olibucha로 명명함
1855년(영국)	독도를 Honet 섬으로 명명함
1877년(일본)	일본이 독도가 일본에 속하지 않음을 인정함
*1882~3년	한국인이 울릉도에 거주 시작
*1900년	한국 황제 칙령 41조에서 독도(석도)가 공식 저널에 기록됨
1905년(일본)	독도를 다케시마로 명명
1946년(미국)	맥아더 제독 677조, 독도는 한국의 영토임 (맥아더 라인 1033조)
1947년(미국)	미군이 독도를 공격 훈련 지역으로 지정함 (1948년 한국 정부 설립)
*1950년	한국이 독도에 기념탑을 세움
1951년(미국)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러스크 문서 ‘독도는 일본의 영토’
*1952년	이승만 평화 라인, 스티브 서한‘독도는 한국의 영토’ 독도에 관한 학술 연구
*1953년	이승만과 요시다 정전협정. 독도에 대한 세 번째 학술 연구

7) 강준식 (2012). “독도의 진실” p.354~359, 2012 소담출판사

<표 1> 독도 문제에 대한 연대기

(계속)

(*한국)

1953년(일본)	6월 시마네현의 어업 허가서가 발행됨
1954년(일본)	시마네현에 의해 독도에 대한 광업 허가권 발행 (35,480엔의 지방세 납부)
*1954년	한국 - 등대 설치, 군대 주둔, 우표 발행 일본 - ‘고유 영토설’ 주장,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요청, 한국 거부
*1954년	등대 건축, 우표 발행, “한국 영토” 표식을 바위에 새김
*1956년	독도 수비대가 국립경찰(울릉도 경찰서)에 소속됨
1965년(일본)	6월 일본이 한국의 독도 통치권을 비밀문서로 인정함
*1979년	한국 국제법률 학술위원회인 ‘독도 연구회’ 한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독도를 방문하여 연구함 (김명기, 2018)
*1981년	최종덕이 독도의 거주자로 등록함
*1982년	한국이 독도를 국보 336호로 지정함
*1986년	최 씨 가족의 거주자 등록, 두 명의 아기가 독도에서 출생
*1999년	새로운 한국 일본 어업 조약 (독도 영유권 제한)
*2000년	주소가 울릉군 독도리로 변경됨
*2004년	남북한 독도 기념 우표 발행
2005년(일본)	일본 - 시마네현 ‘다케시마의 날’ 지정 (1999년 이후, 520명이 독도를 본적으로 등록)
*2006년	노무현 대통령의 동해 선언
*2007년	김승도가 마을 대표로 독도 사랑 카페를 창업 세금 납부 1987년 이후 30가구와 103명이 독도를 본적지로 등록함
2008년(일본)	일본 교과서에 ‘독도 고유 영토설’ 언급
2012년(일본)	일본 교과서에 한국의 독도 불법 점유를 주장하기 시작

4) 결과적 상황

독도에 대한 역사 및 정치적, 국제법적, 그리고 공공외교적인 관점의 분석과 연대기를 살펴본 바와 같이, 독도에 대해 상반되고 첨예한 이해관계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은 두 나라 사이에 예민한 긴장과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

역사적 관점의 연구는 독도에 대해서 일본이 역사적 자료들을 제시하며 자국의 영토로 주장하고 있지만, 자국의 입장에서 자료들을 왜곡하여 해석하고 객관적이고 타당한 사실들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고수하며 역사를 부리고 있으므로 방대한 자료들이 해결책으로 인정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288권 900여 저널, 일본은 637권과 22개 저널 이상의 수많은 연구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합리적인 이해와 결정적인 성과는 없었다(김병렬, 2016). 또한, 정치적 관점의 논의는 일본이 독도 문제를 국내 정치에 유리하게 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왜곡이 가속화되고 있고 양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로 대표되고 있다. 먼저, 1953년 한국과 일본이 외교 관계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가와카미 젠로, 외무부상은 독도에 대한 고유 영토 설을 제기했다. 2005년 이후로 일본은 다케시마 날을 제정하고⁸⁾ 시마네현에 다케시마 연구회를 설립하고 일본의 주장을 공식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2008년부터 일본 외무성은 위원회의 연구를 토대로 다케시마 10 조항⁹⁾을 만들고 일본이 17세기부터 독도를 관리해왔다고 주장한다(송휘영, 2018). 한국 외교부는 독도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외교부 독도 사이트를 만들었고¹⁰⁾ 2000년 8월 민간단체인 독도수호대가 10월 25일을 독도의 날(獨島-日, Dokdo Day)로 제정하였다.¹¹⁾ 이는 고종이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정하는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제정한 1900년 10월 25일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양국은 정치권 등 독도에 관한 상반된 주장이 있을 때마다 감정적인 대응으로 혼란과 갈등을 겪고 서로에 대한 불신과 분노를 반복하는 양상을 지속하고 있다. 예를 들면, 2021년 도쿄 올림픽에서 일본이 독도를 자국으로 지도에 표기함에 따라 한국 측이 올림픽 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하는 일과 같은 사례들이 계속 반복되며, 다시금 국제적인 주목을 불러일으키면서 계속해서 혼란과 갈등이 심화 되는 상황에 놓여 있다.

국제법적 관점에서는 지금까지 세계 여러 가지 사례들을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영토 분쟁을 국제기구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어렵고, 결과적으로 분쟁국 간에 큰 부담과 손실을 초래하게 되며 한국과 일본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기에 효과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다.

공공외교적 관점에서는 자국 및 해외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소통과 대화의 측면에서 볼 때, 국가안보 통치권에 대한 도전인 영토 분쟁은 결과적으로 다음 세대의 교육과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문제가 된다. 더욱이, 이는 국제사회의 긴장과 혼란을 일으키며 공공외교와 국가 이미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준다. 일본은 2014년 이후부터 한국이 독도를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고, 2017년부터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며 교과서에 이를 기재하고 교육을 통한 사회화를 하고 있으며(김병연, 이상균, 2019) 한국 또한 교과서에 독도에 대해 교육하고 있고 많은 연구 서적들을 출판하고 있다(홍승근, 서종신, 2018). 이러한 상반된 교육은 다음 세대에 심각한 갈등을 초래하게 된다.

8) 다케시마의 날 <https://www.yna.co.kr/view/AKR20210222085051073>

9) 다케시마 10조 항 https://www.kr.emb-japan.go.jp/territory/takeshima/pdfs/takeshima_point.pdf

10) 외교부 독도 <https://dokdo.mofa.go.kr/kor/>

11) 독도의 날 10월 25일 <https://www.hani.co.kr/arti/area/yeongnam/1016475.html>

3. 협상 이론 및 전략의 적용과 해결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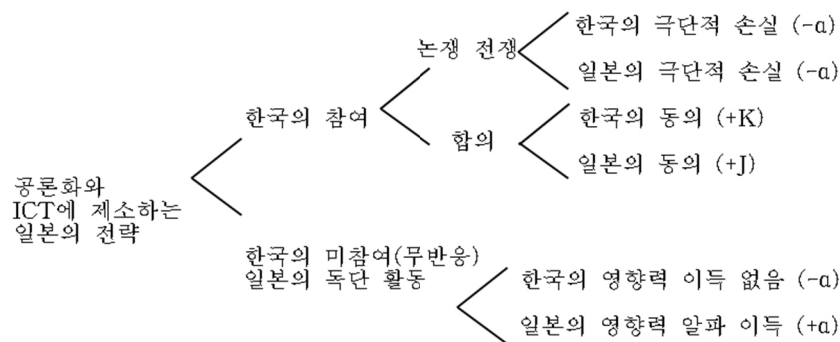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역사적 자료들을 왜곡하며 다양한 정치적 행보와 국제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활동들 그리고 자국민 및 해외 대중 대상의 외교적 홍보 활동을 하면서 한국의 이익을 위해 한국 영토에 대한 도발을 지속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 양국이 독도 문제에 대해 협상이라는 공식적 합의의 허들을 놓고 마주하기 이전에 먼저 다양한 방식의 교류와 소통을 통해 갈등을 해소해나가고 서로 간의 존중과 신뢰를 쌓아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고 우선되는 일이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성과가 없고 갈등이 지속 되어 어느 시점에서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면 협상이라는 단호한 합의를 이루어야 할 수도 있다. 일본은 기존의 질서를 깨는 도전자로 인식되며 국제적으로 영토 분쟁에 대한 평화적 해결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대상국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1954년 이후, 78건 중 90%가 도전자의 합의로부터 이루어졌고 목표 국의 합의가 없는 경우가 17%, 법률적 합의는 20건에 그친다. 이는 영토 분쟁 문제의 해결이 쉽지 않음을 나타내며(안은주, 2012) 한국과 일본이 협상의 상황에 놓이게 될 때, 어떠한 논리와 전략을 가지고 협상에 임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석과 논의를 다음에서 전개한다.

1) 협상 이론과 전략

독도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협상 이론과 전략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엔트리 게임 이론(Entry Game Theory)은 한국이 일본과의 논쟁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일본이 독자적인 행동으로 $+ \alpha$ 를 얻게 되고 한국은 아무런 이득을 얻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한국은 게임에 참여할 필요가 있고 이것은 양측이 극단적 손실을 주게 되는 논쟁의 전쟁이 되거나 양측이 긍정적인 이득을 얻게 되는 합의의 결과($+K$ 와 $+J$)를 이루게 된다. 즉, 엔트리 게임 이론에 따르면, 양국은 양측의 상호 이득을 얻게 되는 협력적인 합의를 이루는 방향으로 협상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Camerer, C. F., 1997). 두 번째로, 퍼트남의 양면 게임 이론은 양국 간의 협상은 외부적으로 국제적인 관계의 단계와 내부적으로 국내적인 이해당사자들의 이중 단계로 구성된다. 이것은 국가들 사이의 협상은 국가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국내 이해당사자들의 관계 또한 주의 깊게 고려되어야 함을 의미한다(Putnam, R.D., 1988). 세 번째로 가능한 합의 접점을 의미하는 협상 가능 영역(ZOPA, Zone of Possible Agreement)은 독도 문제에 있어 한국과 일본의 이해관계가 서로 중첩되는 영역을 의미하고 양국이 이 승리 조합 안에서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Wheeler, M., 2002). 마지막으로, 양국이 합의에 이르기 위해 가지고 있는 대안들, 즉 바트나(BATNA, Best Alternative To a Negotiated Agreement)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Fisher, R., et. al, 2011). 다음은 각 협상 이론들을 좀 더 상세히 분석하고 적용하고자 한다.

(1) 엔트리 게임 이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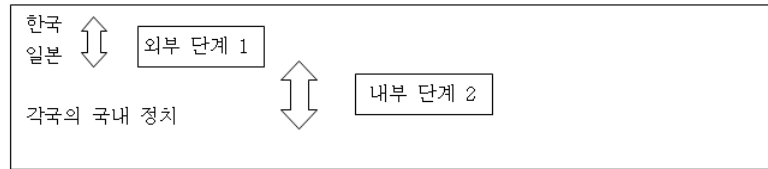
엔트리 게임 이론은 경쟁 상대가 게임에 참여할 때 이에 대한 대응으로 참여를 하거나 혹은 하지 않을 때 또는 어떤 방식으로 참여를 할 때, 이익과 손실을 얻게 되는지 상황에 따른 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예측하여 대응하는 이론이다(Camerer, C. F., 1997). 즉, 일본의 도발에 대해 한국이 어떠한 태도를 보여야 하는지에 대해 적용 가능한 협상 이론으로 먼저 엔트리 게임 이론을 살펴볼 수 있다. <그림 6>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영토에 대한 분쟁화는 도발국인 일본의 전략으로 이에 대해 과도한 반응은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에 신중히 처리할 필요가 있지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일본의 독단 활동을 방조하는 상황이 되며 이는 일본의 알파 이득(+ α)만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한국의 참여가 필요하고 양국에 극단적 손실(- α)을 주는 논쟁 전쟁보다는 합의를 통해 양국 모두에게 이익(+K, +J)이 되는 방향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림 6] 독도 문제에 대한 엔트리 게임 이론

(2) 퍼트남의 양면 게임 이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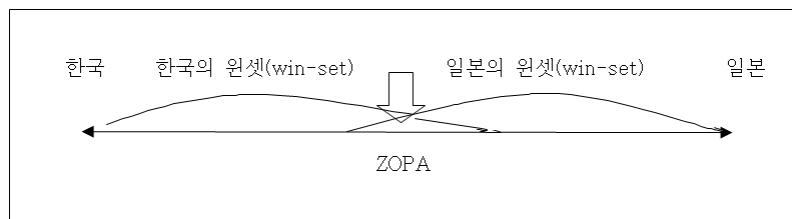
퍼트남의 양면 게임 이론은 외교 대상국의 합의가 국가 간의 협의뿐만 아니라 각국의 국내적인 협의가 함께 논의되고 이 이중 단계 모두가 재고되고 승인되어야 하는 양면 게임임을 뜻한다(Putnam, R.D., 1988). 즉, <그림 7>과 같이 독도 문제가 한일 양국 간의 협의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오랜 기간의 역사를 거치면서 양국 내 국내적으로 축적된 인식과 문제들이 논의되고 승인되지 않는다면 궁극적인 합의를 이룰 수 없음을 뜻한다. 따라서, 대상국과의 정치적, 외교적인 노력인 외부단계의 노력뿐만 아니라, 역사 및 사회적으로 또한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외교적 관점의 국내적인 내부 단계의 접근도 중요함을 의미한다.



[그림 7] 독도 문제에 대한 퍼트남의 이중 단계 게임

(3) 협상 가능 영역, ZOPA

협상 가능 영역(조파, ZOPA, Zone of Possible Agreement)은 협상 당사자들이 원하는 결과인 윈셋(win-set)이 중복되는 영역을 뜻하는 것으로 즉,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범위를 뜻한다. 이 범위가 넓을수록 협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커진다. <그림 8>과 같이, 독도 문제에 대해 한국과 일본은 양국이 원하는 윈셋을 국외 및 국내 양면 단계로 분석하여 양측이 중복되는 영역을 최대한 확보하여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Wheeler, M., 2002).



[그림 8] 독도 문제에 대한 협상 가능 영역, ZOPA

(4) 바트나(BATNA), 차선택

바트나는 협상 연구자들인 하버드 프로그램의 로저 피셔(Roger Fisher)와 윌리엄 우리(William Ury)에 의해 개발되었다. 이는 협상자들이 협상하지 않거나 협상에 실패하게 된다면 취하게 되는 결과들을 뜻하는 것으로 따라서 협상자들은 이 바트나 보다 더 선호되는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즉, 바트나는 협상 합의에 대한 ‘최고의 대안’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바트나를 기준으로 협상자들은 어떤 합의들을 제안해야 하는지 측정할 수 있다. 즉, 바트나를 분석하여 준비할 때 실제 협상에서 지양되는 합의 조건들을 피하고 또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이득 조건들을 거절하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다음에 제시된 한국과 일본의 바트나는 합의를 위해 제안된 가능한 해결책들 보다 덜 매력적이고 덜 호의적인 것들로 올바른 합의안들을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다(Fisher, R., et. al, 2011).

① 한국의 바트나

- 가. 일본으로부터 독도에 대해 계속되는 영토 분쟁
- 나.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라는 일본으로부터의 압박
- 다. 독도에 대한 일본 학생들과 대중의 왜곡된 사회화
- 라. 독도 영유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오해와 한국의 법적 명성에 대한 의심
- 마. 논쟁에 대항하는 데 소모되는 자원
- 바. 중대한 문제를 다루는 정부의 능력에 대한 국내 대중으로부터 신뢰 상실
- 사. 일본과의 관계 악화가 다른 문제들로 확대되는 광범위하고 부정적인 영향들

② 일본의 바트나

- 가. 막대한 가치를 가진 독도에 대한 영토 확장의 가능성
- 나. 독도에 대한 한국의 영유권에 대한 의구심을 퍼뜨림
- 다. 국가적 이득을 추구하는 국내 대중으로부터 호응과 지지를 획득
- 라.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도록 한국을 압박하는 부담
- 마. 한국과의 관계 악화와 그로 인해 다양한 문제로 확대되는 부정적인 영향들
- 바. 유사한 논쟁에 처한 다른 약소국들과 도덕적인 관점에서 서구 나라들로 받는 비평
- 사. 제국주의적 행보로 인한 국가적 이미지 손실

2) 협상 전략의 원칙들

협상에서 일반적인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창의적인 선택지들을 형성하기 위한 다음의 네 가지 전략이 있다.

- ① 문제들을 판단하는 것에서 선택지들을 만들어 내는 과정을 분리한다.
- ② 한 가지 해결책을 찾기보다 협상의 선택지들을 확대한다.
- ③ 상호 이익을 추구한다.
- ④ 판단을 쉽게 만드는 방법을 만든다.

또한, 추가적인 전략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상호 이익을 얻기 위한 선택지들을 만들기 위해서 문제에 대한 가능한 모든 해결책을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하고 다양한 제안들을 만들고 난 후에 생각들을 평가한다. 가장 유망한 제안들을 평가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적절한 시점에 제안들을 심사숙고하고 개선하며 공유하는 이득에 대해 집중하고 이해당사자들의 견해가 다른 경우, 그러한 차이들이 서로 조화되고 심지어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선택지들을 찾는다. 상대방에게 흥미롭고 궁극적으로는 쉽

게 합의할 수 있는 제안들을 만들고 결정자들을 파악하고 그들을 목표로 제안한다(Fisher, R, et. al, 2011).

① 각각의 이슈들을 목표로 하는 항목들로 구성하여 연합된 방향으로 프레임을 만들고 상대방 제안 뒤의 논리를 파악한다.

② 어떤 기준들이 가장 적절하고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논리적으로 사고한다. 압박이나 뇌물에 절대 굴복하지 말고 오직 원칙을 따르며 상대방이 합당한 사항에 대해 완고히 거절할 때는 대체 항목을 찾기보다 과정적 항목들을 찾는다(Fisher, R., et. al, 2011).

4. 세 가지 관점의 해결 방안

영토문제에 대한 해결은 쉽지 않고 협상 절차에 이르기 전에 최대한의 노력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모든 노력에도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양측의 입장에 최선의 이득이 되는 전략으로 합의를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 독도 문제에 관해 연구되어온 세 가지 관점의 분석, 즉 역사 및 정치적, 국제법적, 그리고 공공외교적 논의들은 다양한 관점으로 접근된 현 상황을 통합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이러한 논의들은 각국의 입장을 주장하고 옹호하는 논리의 발전으로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독도 문제를 해결하고 양국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이끄는 데 있어 효과적인 방향으로 향하기보다 각국의 태도를 고수하면서 공격하고 방어하거나 시간이 갈수록 갈등의 극으로 치닫는 역효과의 길로 향하고 있다. 따라서, 보다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이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다양한 협상 이론들, 즉 엔트리 게임, 양면 게임, 협상가능영역, 바트나를 적용하여 다음의 세 가지 해결 방안, 즉 첫째 역사 및 정치적 관점을 반영한 대응적 강경전략, 둘째 국제법적 관점을 적용한 법적 행정전략, 마지막으로 공공외교적 관점을 발전시켜 적용한 공공외교적 포용·상생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 대응적 강경전략

이 제안은 일본의 도발에 대한 강한 대응 방식으로,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굳건히 하고 이에 대한 어떤 도전도 용납하지 않는 강경한 입장표명과 적극적 행동을 취하는 방안이다.

① 일본은 한국의 독도 영유권에 대해 역사적이고 현재의 명백한 사실로서 인정하며 향후 그 어떤 혼란과 갈등을 일으키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양국은 이를 확실히 하는 문서를 작성하고 국내 국제적으로 공표한다. 또한, 모든 국내(교과서 등) 및 국제 문서에 독도와 동해 표기를 통일한다. 이를 통해 일본은 침략국의 이미지를 청산하고 한국과 협력적인 관계를 발전시켜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 및 국제적으로 청렴국의 위상을 얻는다.

② ①을 실행하지 않을 경우, 한국은 일본이 독도에 대해 도발하는 데 대한 대응 방안으로 일본이 자국의 ‘섬’으로 주장하며 영해를 확보한 오키노토리(Okinotori) ‘암초’¹²⁾를 섬으로 인정하지 않는 주변국들의 견해와 같이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적극적인 활동을 추진한다.

2) 법적 행정전략

두 번째, 독도 문제를 국제법률 기구를 통해 해결하는 방안이 있다. 한국이 현재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점유하고 있는 만큼 그 어떤 법적 논쟁에 대해 반응할 이유가 없고 제3의 기구에 의한 이 제안은 다양한 위험이 따르며 파급력이 강하고 돌이키기 어려우므로, 도발국인 일본 역시 이 방안을 제기하면서도 부담을 느끼는 처지기도 하다. 따라서 최후의 불가피한 상황에서 제시되는 방안이며, 일본은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려고 하지만, 한국은 독도 문제가 제국주의의 연장으로 제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성삼제, 2016).

① 일본 측 제안 -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고 그 결정을 따른다.

② 한국 측 제안 - 독도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고 그 결정을 따른다.

국제사법재판소와 관련된 경우들은 다음과 같다. 네덜란드와 스페인의 팔마스(Palmas) 섬과 프랑스와 멕시코 사이의 클리퍼턴(Clipperton) 섬, 1953년 영국과 프랑스 사이의 망끼에(Minquiers)와 에크레호(Ecrehos) 섬,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사이의 폴라우 리기탄(Pulau Ligitan)과 폴라우 시파단(Pulau Sipadan),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사이의 페드라 브랑카(Pedra Branca), 필리핀과 중국 사이의 남중국해, 그리고 중국과 베트남 사이의 파라셀(Paracel) 섬과 같은 무력에 의한 사례들과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의 카슈미르(Kashmir)는 결과적으로 심각한 후유증을 남겼다(이창위, 2018).

국제해양법재판소가 제시한 바대로 해양조약 121에 따르면, 독도는 12해리의 바위로 인식되거나 200해리 또는 대륙붕의 섬으로 인식된다. 독도의 현재 거주자들은 40명의 경찰대, 5명의 등대지기, 2명의 울릉군 지역 사무소 직원, 한 세대 2명의 거주자들이다. 독도 방문객들은 2005년과 2014년 사이에 천 이백만 명 이상이다. 하지만 국제해양법재판소는 안정적인 거주자들의 경우, 그 지역의 자원에 의지해서 생업을 하는 경우 인정하고, 자연 지리적인 요소와 무관한 인위적인 활동은 결정적인 요소로 간주하지 않는다(김원희, 2016). 또한, 통치는 실질적인 지배권 행사로서 일반적으로 그 국가의 권위에 의해 인정되지만, 예외로서 안용복의 활동이 속종실록에 기록된 것과 같은 몇몇 경우들 또한 같은 권위로 간주한다. 독도에 관한 학술적 연구와 해외 도서관 등의 자료들에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명칭을 통일하기 위한 노력과 관광 및 문화 행사들, 비정부기구들과 시민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의

12) 일본은 오키노토리섬을 인위적으로 확충하여 해양영토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810031651056455>

미 있는 행사들을 추진하여 독도의 가치를 더욱 빛내고 홍보하는 활동들이 필요하다. 세계의 주목을 받는 한국의 대중음악, 영화, 드라마, 음식 등과 같은 한류의 소프트 파워를 활용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며 IT 기술혁명으로 젊은 세대들 및 전 연령층을 포함하여 인터넷 정보에 영향을 많이 받는 시대에 소셜 미디어와 인터넷 플랫폼 등의 온라인 소통 전략은 독도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실행되어야 한다. 정부는 독도가 문헌에서 석도, 돌섬 또는 독섬과 같이 다양하게 역사적 자료들에 기재 되어 있는 만큼, 이 이름들이 독도로 바뀐 과정에 대해 더욱더 많은 정보를 명확히 홍보할 필요도 있다. 또한, 독도에 관한 대부분 기록은 미국, 호주 그리고 영국과 같은 몇몇 특정한 나라의 도서관들에 집중되어 있다. 독도와 관련된 기록들의 키워드 제목은 ‘독도’가 76.1% ‘다케시마’가 17.6% ‘리앙쿠르트 바위’가 0.4% 그리고 이 용어들의 5.9%가 각 나라의 국립도서관에 함께 보인다. 독도와 관련된 기록들의 54.9%가 ‘독섬(한국)’ 또는 ‘독도’이고 11.2%가 ‘다케시마,’ 1% 미만인 ‘리앙쿠르트 바위’와 ‘독도/다케시마’ 그리고 33%가 일반적인 주제이다. 독도에 대한 정보는 도서관 간의 책 기증, 자료 교환, 그리고 더 많은 도서 자료들의 출판과 번역 등이 제공되어야 한다. 독도의 공식 이름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름인 독도 또는 독섬으로 통일되어야 한다(김정현, 2019). 또한, 해양부가 발표한 바와 같이 일본에 의해 멸종된 독도 강치 복원을 위해 러시아로부터 비슷한 종을 가져오는 방법도 고려할 사항이다.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사이의 시파단섬에서 말레이시아가 바다거북의 멸종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국제사법재판부의 최종 결정에서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 같은 경우이다. 이처럼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다양한 전략이 실행되어야 한다.

3) 공공외교적 포용 · 상생전략

이 제안은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굳건히 하되, 양국의 우호적인 관계와 상호 번영을 위해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자 상호 대화와 협력의 노력을 추구하는 방식이다. 장기적인 계획에서 이 합의는 논쟁적인 독도 문제를 협력의 기회로 사용함으로써 양국 관계에 대해 긍정적인 관점으로 전환하는 계기로 삼을 것을 제안한다. 즉, 양국의 갈등과 긴장으로 인한 소모적인 손실을 최소화하고 국제적으로도 과거 역사를 포용력 있게 극복하고 평화와 협력적인 관계로 전환하는 모범적인 사례를 정립하여 공공외교적으로도 큰 성과를 거두는 계기를 마련하여 양국 모두 발전적 혜택을 누리하고자 한다.

① 일본은 한국의 독도 영유권에 대해 역사적이고 현재의 명백한 사실로서 인정하며 향후 그 어떤 혼란과 갈등을 일으키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양국은 이를 확실히 하는 문서를 작성하고 국내와 국제적으로 공표한다. 또한, 모든 국내(교과서 등) 및 국제 문서에 독도 및 동해 표기를 통일한다. 이를 통해 일본은 침략국의 이미지를 청산하고 한국과 협력적인 관계를 발전시켜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 및 국제적으로 청렴국의 위상을 얻는다.

② 한국은 일본의 결단에 대해 과거 제국주의적 행보에 대한 반성과 청산의 의지로 포용하며 과거

사의 부정적 관계보다는 앞으로의 협력적인 관계에 대한 의지를 발전시키도록 하며 독도에 대해 일본과의 협력을 도모하며 다음의 공공외교를 추진한다.

가. 자국민(한국) 대상 공공외교

㉠ 한국 정부는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혼란에 휘말리는 행보를 지양하고 독도의 발전적 이해와 발전을 위한 전문가와 시민사회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 한국은 독도에 대한 일본의 긍정적인 관심에 대해 즉각적인 반일적 정서와 애국심을 표출하기보다 정중한 우호심으로 이해하고자 노력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협력하고 공유, 발전시킨다.

㉢ 한국 정부는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의 역량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보다 선제적이고 포용적인 태도로 독도 문제를 바라보도록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외교 활동을 개발하고 과거사로 인한 피해 의식과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고 나아가 국제 질서와 가치를 선도하는 국가로서의 목표를 제시한다.

나. 상대국(일본) 대상 공공외교

㉠ 일본의 독도에 대한 도발 행보는 국내적으로 단기간의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하여 이득을 얻을 지라도 장기적으로는 다음 세대에 큰 혼란과 갈등 나아가 불신과 좌절감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또한 국제적으로는 일본의 국가 이미지와 위상에 치명적인 손실을 주는 행위임을 분명히 깨닫도록 주지시킨다.

㉡ 일본 정부가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한 행보를 지양하고 독도에 관한 학술적 연구 및 친선활동을 위한 전문가와 시민사회의 활동을 지원하도록 촉구한다.

㉢ 일본이 영토에 대한 도발로서의 독도에 관한 관심을 완전히 청산하고, 다음 세대들이 이제는 잘못된 정보로 인해 혼란을 일으키는 교육을 받지 않도록 확실히 하고 이웃 나라 한국에 대해 정중한 우호심을 갖도록 협력한다.

㉣ 한국의 독도와 울릉도 그리고 일본의 오키섬과 시마네현 등과 친선관계를 맺고 방문 및 축제 등의 다양한 교류 활동을 추진한다.

다. 국제(대중) 대상 공공외교

㉠ 한국 정부는 과거 역사적 갈등과 불신이 만연되어온 한국과 일본 양국의 관계에 있어 이를 대표하는 독도 문제를 오히려 양국이 평화와 상생의 관계로 새롭게 전환하는 기회로 활용하여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선도적이고 모범적인 사례를 정립하는 성숙한 국가임을 표방한다.

㉡ 한국이 독도를 통한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지향하는 노력을 표방함으로써, 나아가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협력과 평화를 도모하고 국제적으로 다양한 영토 분쟁 및 갈등의 새로운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㉔ 독도를 별칭 ‘평화와 포용의 큰 섬’으로 지정하고 역사, 지리, 해양자원 등에 대해 연구하는 국제학술회의를 활발히 하며 특히, 일본과의 협력을 통한 세계적 기여를 활성화하며 다양한 국가들과 스포츠, 문화, 관광 등과 같은 여러 행사를 통해 화합과 상호이해 및 발전의 기회를 확대한다.

㉕ 한국은 일본의 제국주의 행보로 인한 양국의 부정적 관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은 친환경 상징물을 독도에 설치하여 독도를 양국의 관계가 회복되는 평화의 장소로서 두 나라와 국제사회에 긍정적으로 인식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나아가 세계 평화를 위한 용서와 포용, 상생의 모범적 선도사례를 주도한다.

5. 결 론

한국과 일본은 과거 오랜 기간의 갈등이 심화 된 역사적 배경이 있고 이에 대한 깊은 감정적 대립이 현재의 관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하지만, 세계화와 과학 기술의 혁신적인 발전으로 전 세계가 긴밀해지고 더욱이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역사적으로 많은 것을 공유하는 두 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선도국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현시점에서, 양국이 계속되는 갈등의 소모전을 하기보다 상호 번영을 위해 과감한 결단과 포용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로의 적극적인 전환을 하는 것이 절실하다. 이런 상황에서 우선 한국은 독도 영유권이 명백하지만 소중한 국토로 더욱 관리를 빈틈없이 하고 국제사회에서도 더 명확히 인정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일본과 협상이라는 공식적인 절차를 사용하기 이전에 정부 차원의 노력과 함께 비정부기구들과 민간 차원의 교류 활동을 통해 독도 문제가 불신과 분노를 초래하는 대상이 아니라, 대화와 협력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두 나라 간 평화적인 교류를 갖는 노력이 더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2017년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처음 방문했을 때, 청와대에서 특별히 준비한 만찬에 오른 ‘독도 새우’는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주목을 받았는데, 독도가 가지는 갈등의 상징적 요소가 드러나면서 일본 측의 문제 제기로 다시금 쟁점이 되기도 했다.¹³⁾ 만약 독도 새우가 한국과 일본의 협업으로 학술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생태 연구 등의 공동의 관심사였다면 어떤 결과가 되었을까? 아마도 양국의 협력과 화합을 상징하는 기회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을 수도 있을 것이다.

두 나라의 관계가 고대부터 현재까지 식민시대와 전쟁과 같은 험난한 시기를 거치며 국가 간 힘의 경쟁 관계를 거치며 과거 오랜 기간의 역사적 배경에서 서로 어긋나 있어서 독도 문제는 영토권 문제를 넘어서 매우 민감하고 긴장된 문제로 해결하기에 매우 어려운 협상이다. 하지만 매우 많은 역사적 자료와 현재 한국 영토로 점유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일본의 도전은 소유자의 자존심과 자신감을 가진 한국인들이 그들을 협상자로 간주하고 체계적이고 인내심 있게 다루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첫

13) The JoongAng정치, 트럼프 둘러싼 韓·日 ‘새우 전쟁’ <https://www.joongang.co.kr/article/22094086#home>

번째 해결 방안은 단호한 결단의 대응적 전략으로 일본의 도전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하는 방안이다. 일본이 한국의 영유권이 명백한 독도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불합리한 과욕을 고집한다면 이에 대해 상응하는 강한 전략으로 일본이 해양영역을 인위적으로 조성하여 확보하고자 하는 오키노토리섬에 대해 강한 이의를 제기하고 적극적인 규명과 시정을 추진하는 방안이다. 두 번째 해결 방안은 갈등의 극한에서 최후의 방법으로 위협이 큰 법률적 전략이지만 더 이상의 첨예한 오해와 갈등이나 정치적 경제적 충돌로 인한 고통과 손실이 다음 세대에도 이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된다. 이는 근본적인 갈등의 해결 없이 경제적 외교적으로 큰 부담을 갖고 제3의 국제기관에 의한 중재와 판결에 의지하는 전략이므로 불가피한 상황에서의 마지막 선택지이며 되도록 상호 간의 대화와 협력적 노력을 만드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마지막 해결 방안은 상호 협력을 추구하는 포용적 전략으로,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분명히 인정하고 이후 상호 번영을 이끄는 평화적인 대화와 교류의 기회를 확대하여 학술 및 다양한 문화적 기회를 공유, 추진하는 방안이다. 이를 통해, 양국은 오랜 역사의 갈등을 해소해나가고 국제사회에서 참회와 용서, 포용과 상생의 성숙한 국가 관계에 관한 모범사례로 인식되는 공공외교적 성과를 거두어 세계 평화와 번영에도 이바지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해결이 쉽지 않은 영토 분쟁에 대해 역사 및 정치적, 국제법적, 그리고 공공외교적 관점에서 다각도로 분석하고 이에 대해 협상의 이론과 전략을 적용하여 가능한 세 가지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 양국의 정치, 경제, 사회와 문화 및 국민 정서적으로 멀고도 깊은 틈을 메우고 갈등을 극복하여 긍정적인 대화를 하도록 제시한다. 이를 통해 더 많은 갈등과 손실들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고, 독도가 더는 갈등의 대상이 아닌 양국의 화합과 상호 번영을 위한 발전의 계기가 되는 기회의 대상으로 전환 발전할 것을 논의하고 제안한다.

참고문헌

- 강준식 (2012). “독도의 진실” 2012 소담출판사
- 강정민 (2014). 독도반환청구 소송 한일 독도 전문가 끝장토론 chosun ilbo. Retrieved December 2, 2019 <http://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NewsNumb=002304100012&ctcd=C03>
- 곽진오 (2020). 고문헌에 나타나는 한국·일본의 독도 인식. 일본 학보, (125), 219-241.
- 김명기 (2015). 국제법상 국제연합에 의한 한국의 독도 영토주권 승인의 효과. 국제법학회 논총, 60(1), 35-55.
- 김명기 (2018). “대한국제법학회의 독도 학술연구조사에 의한 한국의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 국제법학회 논총, 63(1), 233-263.
- 김병렬 (2016). 독도 관련 문제 연구를 위한 일 제언. 영토 해양연구, 11, 6-32.

황미애 / 한국의 독도, 평화와 상생의 기회: 공공외교 및 협상 관점의 연구(탁월한 소시민 협상가, 어부 안용복을 기리며)

- 김병연, 이상균 (2019). “일본 중등 지리교육의 독도 관련 영토교육 내용 분석 - 학습지도 요령 및 해설과 지리 교과서를 중심으로” 영토 해양연구, 17, 62-88.
- 김원희 (2016). “남중국해 중재판정과 독도의 법적 지위에 대한 합의” 해양정책연구, 31(2), 55-100.
- 김명기, 배규성 (2017). “남중국해 사건에 대한 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과 한국의 독도 영토주권에의 합의” 아세아연구, 60(3), 65-101.
- 김정현 (2019). “세계 각국의 국가 도서관에 있어 독도 관련 목록 레코드 비교 분석” 한국도서관 정보학회지, 50(2), 1-23.
- 김재형 (2007).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상의 독도 영유권” 국제법학회 논총, 52권 3호 2007, pp. 103~124.
- 김찬규 (2009). “독도는 우리 땅, 새 문헌 발굴 쾌거” 세계일보, 2009. 1. 7 민유기, 최재희, 최호근, 민경현. 2011. 유럽의 독도 인식 동북아역사재단. ISBN 987-89-6187-251-5-93900.
- 성삼제 (2016).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인 이유, 태학사.
- 송휘영 (2018). “독도에 대한 일본의 고유 영토론과 독도 인식” 한국 동양정치 사상사연구 17(2), 167-198.
- 안은주 (2012). 외교부 국제법 동향과 실무 11권 3, 4호 통권 제29호 192~ 독도 국제학술회의 우준희. (2019). “동북아 영토 분쟁과 일본의 선택: 독도, 센카쿠, 쿠릴열도에 대한 일본의 다층화 전략” 현대정치연구, 12(2), 67-115.
- 윤유숙 (2011). [유럽의 독도 인식](민유기 · 최재희 · 최호근 · 민경현, 동북아역사재단, 2011). 영토 해양연구, 2, 160-167.
- 이창위 (2018). “독도 문제를 둘러싼 법적 정치적 논의의 전개” 서울 법학, 26(1), 233-266.
- 최경옥 (2017). “독도와 다케시마의 영토문제와 한국의 대응 방향(SCAPIN과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공법학연구, 18(2), 75-109.
- 홍성근, 서종진 (2018). “일본 초중고 개정 학습지도 요령 및 해설과 독도 관련 기술의 문제점” 영토 해양연구, 16, 30-57.
- Camerer, C. F. (1997). Progress in behavioral game theory.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11(4), 167-188.
- Fisher, R., Ury, W. L., & Patton, B. (2011). Getting to yes: Negotiating agreement without giving in. Penguin.
- Kwak, J. O. (2018). South Korean Governments' Dokdo Policies seen through Stenographic Records at Japan's Parliament. 일본 학보, 114, 131-152.
- Nye, J. S. (1990). Soft power. Foreign policy, (80), 153-171.
- Putnam, R. D. (1988). Diplomacy and domestic politics: the logic of two-level games. International organization, 42(3), 427-460.
- Wheeler, M. (2002). Negotiation analysis: An introduction. Harvard Business School Pub..

Abstract

Dokdo of Korea, A Chance for Peace and Co-Prosperity
A Study Using Perspectives of Public Diplomacy and Negotiation Strategies
(Memorial Lesson from fisherman, An Yong-bok as a Supreme Negotiator)

Mi-ae Hwang

(Doctoral Student, Ewha Womans University)

Objectives: The neighboring countries of South Korea and Japan in Northeast Asia have interacted in both positive and negative ways, at times as close partners and other times adversaries, throughout their long and thorny history of extensive dynamics. The controversial dispute over Dokdo is one of the most critical issues evoking harsh tensions and arguments asserting wholly opposite claims. Dokdo is a small island between two coastal states, but significant in terms of territorial, botanical, and marine resources, and thus ownership of the island has become a point of conflict accompanied by a troubled history. But why has Dokdo been a source of conflicts and how should the controversial Dokdo issue be addressed in a way that fosters positive influence and co-prosperity?

Methods: This study provides comprehensive and critical insights from a wealth of previous research and strategic suggestions for the Korean government. It utilizes the three perspectives of historical documents and political context, international regulations and legal frames, and public diplomacy. Furthermore, it applies these resources to negotiation theories and strategies to propose reasonable solutions.

Results: This study suggests that it is important for Korea and Japan to try to build mutual trust through more active communication and interaction in order to understand each other before attempting to create a formal resolution via negotiation. In addition to these efforts, Korea needs to be ready for the inevitable need to take decisive action in terms of negotiation, using analytic and efficient strategies. The study proposes three solutions: 1) Strong Action Strategy, 2) International Legal Strategy, and 3) Public Diplomacy Strategy.

Conclusions: From the perspective of public diplomacy, the Dokdo issue needs to be converted from a symbol of conflicts between Korea and Japan into a symbol of peace and co-prosperity. In addition to promoting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states, it can also contribute to the security environment of the Northeast Asian region and global peace.

Keywords: *Dokdo, Public Diplomacy, Negotiation, Peace, Co-prosperity*

투고일: 22. 08. 04.
심사일: 22. 09. 04.
게재확정일: 22. 09. 04.